

기금 배분 11명중 10명이 서울사람

문예진흥기금 서울 독식 심각

예술단체수 따른 나눠주기방식 바뀌야 “편중 시정” 지역예술인 공동대응 나서

26일 제27차 전국예총대표자회의가 열린 광주 라마다호텔 회의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사회 각 분야의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독식 현상 역시 고질병 중 하나다.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전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배분 관행 타파에 공동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 63% 서울 차지=최상운 부산예총 회장이 이날 발표한 ‘2010 상반기 문예진흥 지역별 지원 내역’ 분석 결과 총 지원금 730억원 가운데 서울에 배당된 금액은 63.3%인 461억원이고, 지방에 할당된 금액은 31.6%인 269억원에 불과했다. 광주는 13억원, 전남은 1.7%인 11억 9000만(1.7%)였다. 총 613억원 중 서

울이 419억 8000만(63.3%)을 가져간 2008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수치긴 하지만 지난해 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별반 나아진 게 없는 액수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1000만명이 거주하는 서울에 이처럼 지원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서울에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본 데이터로 삼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예술인수는 서울이 29만 8000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또 복권기금사업 수행단체가 서울에 분포돼 있고, 주요 공연예술행사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자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동등한 문화향유권과 국토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단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지원금을 집중 투입한다면

■2010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지역	지원 건수	지원금	비율
강원	27	22억3700	3.1
경기	160	49억2500	6.7
경남	20	19억4900	2.7
경북	18	3억	0.4
광주	25	13억	1.8
대구	35	38억5500	5.3
대전	21	25억1700	3.4
부산	43	26억5700	3.7
서울	603	461억9000	63.3
울산	3	5억48100	0.8
인천	25	11억5800	1.6
전남	123	11억9000	1.7
전북	21	15억3600	2.1
제주	9	8억9800	1.2
충남	9	1억7400	0.2
충북	20	14억1100	1.9
해외	10	1억	0.1
계		730억	

지역문화계는 고사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타 지역보다 훨씬 탄탄한 문화기반시설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현재 11명의 위원 가운데 지역위원은 부산예총 최상운 회장 1명에 불과해 ‘지방 대변’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8월말로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될 예정이며 현재 위원회 측은 새로운 위원 위촉을 위해 23일 공모를 마감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신임 위원들의 경우 지역 몫을 적어도 3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안서 전달 등 예술인들 공동 대응=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예전과 달리 129개 예총으로 구성된 전국지역예총협의회가 문진기금 배분과 관련, 공동 대응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예총협의회는 문공부와 국회 문방위에 이같은 실태와 대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광주예총도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제안서에는 장기적으로 문진기금을 인구비례로 할당하되, 우선 지역과 서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지역위원을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로했다. 협의회측은 또 각 지자체, 문화재단, 예술인 등과의 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재로선 대북 쌀지원 어렵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서 밝혀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6일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 “최근에 남한에 남은 쌀을 좀 보내면 남쪽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계기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북쪽 여러 입장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칼(KAL)호텔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주최 정치부장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남북간의 문제를 국제 관계 속에서만이 아닌 남북 스스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내일 의사 일정이 국회에 잡혀 있다”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국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총리들) 공식으로 남겨둘 수 없으니 정해진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6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10 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대체로 문제들을 안고 있어 당초 개각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나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통과 공정한 인사를 말하면서 이런 인물들로 과연 리더십이 있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 않느냐고 (이명박 대통령) 문제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번도 못들어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부도덕·부적격 후보자 즉각 사퇴 촉구 야5당·시민사회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명 빼고는 모두 부적격자”

민주 인사청문회 낙마리스트 선정 총사퇴 촉구

민주당은 2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입각 대상자들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과상공세를 폈다.

‘4(위원장직, 세금탈루, 부도산투기, 병역기피)+1(논문표절) 기준에 포함되는 모든 인사들을 ‘부적격’으로 결론짓고, 최대한 낙마를 이끌어 내겠다는 기세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청문회는 한 마디로 ‘거짓말 경연대회’로 ‘4+1’에 해당하면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대상 10명 가운데 이재오 특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박재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김신조(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2 또는 3이 될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관련,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잔뜩 비꼬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위증,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배임과 은행법,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8개 현행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장관 내정자와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

택 및 본회의 인준 과정에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표는 “장관 임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만 총리만은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거짓말’ 및 말바꾸기 시리즈를 비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입각 대상자들의 낙마 사례 비교, 내정자별 의혹, 현행법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한 도표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적격자 사퇴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야권 공조도 강화하고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양산 맑은 공기, 푸른빛 강변, 그림같은 집

이것이 전원주택 이다!!

안양산 밑차락 서성체 앞에 조성된 “레이크 빌” 전원주택

- 안양산의 맑은 공기! 탁트인 전망! 그림같은 집!
- 명품의 전원주택! 중 저가의 분양가!
- 한밤도 형태와 서성체 호수가 자라잡은 최적의 장소!
- 남향 숲 호수 앞반계곡 천혜의 자연조건!
- 광주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의 전원주택!
- 화순의 바경 한산정을 서성체 물한가운 섬처럼 엮었다!

문의: 010-6245-2346 / 010-6305-6567

www.kwango.com

“계속 보호펜 역풍” 한나라 일부 낙마 불가피 여론 확산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위원장직·위원장추천·특별추천 투기·세금탈루 의혹 등 실정법 위반이 확인됐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 사이에 ‘최소 청문회’라는 용어가 확산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해 당이 앞장서 보호막을 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6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한 번 정도 국민이 양해할 수준의 죄송스런 일을 했다면 물라 두세 번 죄송스런 일을 한 분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사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일각에서는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준법태도와 자기관리가 부실한 후보들) 비호한다면 한나라당도 그렇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한나라당 의원 정책토론회에서도 낙마론이 화두였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철 의원은 “일부 인사의 경우 친(親)서민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